

흔들리지 않는 '나사못들'이 필요한 때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김웅 전 국회의원이 검사 시절에 쓴 책 '검사내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검사의 추문으로 검찰 전체가 유포되며 되자 김웅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 검사를 찾아가 분통을 터트렸다. 고한다. 이른바 '귀족 검사'들과는 거리가 멀고 형사부 검사였다. 당시 구속을 받았던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다윗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윤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온통 계엄 수사와 탄핵에만 관심 누군가는 마약·간첩 수사도 하고李 대표 재판도 기한 내에 끝내야 그런 '나사못' 역할이 지금 중요

간첩 수사는 어떤가. 국정원이 2년 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세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도록 만든 국정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증거가 명백한 피의자만 기소하고 내사 단계인 100여 명은 수사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끝 떠 있다. 이 수사도 보이지 않는 나사못들이 해야 한다.

판사들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맡은 재판을 또박또박 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도 늦춰선 안 된

김준의 맛과 섭 [220]

남해 김장용 멸치젓

초등학교 때 가장 부러웠던 도시락 반찬은 햄이었다. 다음은 계란말이, 이어서 멸치볶음이었다. 햄에 계란을 입힌 '햄계란전'은 더 맛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계란은 문방구에 가지고 가면 노트나 연필과 바꿀 수 있었다. 또 계란을 모아 팔아 육성회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멸치도 훈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멸치를 장독이나 찬장 깊이 넣어두고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밥상에 올렸다.

멸치를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날은 멸치젓 장수가 마을에 들어왔을 때다. 볶음용 멸치는 크기가 작은 세멸이나 소멸이나 중멸을 이용한다. 젓갈용 멸치는 7, 8cm 정도 크기의 대멸이다. 할머니가 비린내가 진동하는 대멸 한 상자를 소금에 버무려 젓갈을 담그는 날, 어머니는 묵은 김치를 넣어 조리한 멸치찌개를 저녁 밥상에 올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밭에 배추와 무씨를 뿐였다. 이렇게 멸치젓을 이용한 남해안 김장은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멸치는 새, 고등어, 고래, 상어, 오징어, 게 등 수많은 동물이 즐겨 찾는 먹잇감이다. 그래서 포식자들의 공격을 받으면 함께 큰 무리를 만들어 대응한다. 이러한 멸치의 생존 전략이 어부의 그물에 포획되는 죽음의 길이 되기도 한다. 대멸은 대부분 유자망으로 잡지만, 남해 앙강만이나 강진만이나 미조 해역처럼 정치망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최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사천 죽방역이나 남해 죽방역으로 잡기도 한다.

유자망은 멸치가 이동하는 길목에 수면과 수직으로 그물을 펼쳐 그물고에 걸리게 해서 잡는 어법이다. 그물에 가두어 잡는 볶음용 작은 멸치와 달리,

그물고에 걸어 잡기에 양망 후 그물을 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멸치 머리가 떨어지고 내장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삶아 건조하는 볶음용 멸치는 상처가 없어야 좋지만, 살리는 것 같을 멸치는 적당하게 살이 터진 멸치가 발효가 잘된다. 게다가 봄철에 접한 대멸은 산란을 앞두고 크게 자라고 육질도 부드럽다. 멸치젓은 최소 일 년 이상 산림과 숙성 과정을 거쳐야 김장용으로 좋다. 맑은 애젓으로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봄철이면 부산 대변항이나 남해 미조항에서는 당일 잡은 대멸을 천일염과 버무려 젓갈을 만들어 준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국힘, 이번엔 결사 방어 하라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도 불사하라

이재명 일파, 지금《민중항쟁》2막 시작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면, 끝없는 추락뿐
국힘 배신자 8명 미만이면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나라도 망할 수 있다. 우파 베트남처럼 나라가 망하자면 《취약한 과도기》를 거친다.

한덕수 직무대행 시기가 바로 《취약한 과도기》다. 러시아 혁명 때도 1917년 2월의 1차 혁명 때 케렌스키 우파정권이 들어섰다. 《취약한 과도기》였다. 그 뒤엔 과격한 혁명 세력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같은 해 10월 2차 혁명이 났다. 온건 세력들이 차례로 나

자빠졌다. 끝내는 불세비키 공산경권이 들어섰다. 혁명 시리즈의 종착역은 《미치고 환장한 상태》다. 프랑스 혁명 때의 《자코뱅 공포정치》도 그랬다.

지금 이재명 하는 짓, 안 보이나

오늘의 한국도 《끝없는 평란(太平)》으로 치닫고 있다. 선동 정치꾼들, 선동 언론들 탓이다. 이들에게 놀아나는 《홍위병》도 날뛴다. 모두가 《미치고 환장》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의 비틀거리는 마약 중독자들처럼.

한국 같은 풍요로운 선진국에서 무슨 그런 걱정 하느냐고? 지금 세상에 좌익이 어딨느냐고? 간첩이 어딨느냐고? 그래서 안심하고 우파 대통령 탄핵했더니? 《언론+한동훈+23명+오세훈 등 시도지사들》에게 편지는 질문이다.

그대들은 혹시 《율석열 탄핵》으로 뒷이야기로 돌아갈 줄 알았나?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면, 그걸로 《해피 엔딩》일 줄 알았나? 진짜 그렇게 믿었나? 지금 이재명이 무슨 짓 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한덕수 대행도 끌어내리기 1보 직전

이재명 일파는 지금《민중항쟁》2막에 접어들었다. (한덕

수 직무대행 허수아비 만들기) 단계다. 《끝없는 뒤엎기》다.

언제까지? ※이재명 재판 지연 ※윤석열 탄핵 인용 때까지 그때도 혁명은 또 제3막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무섭게 저들은 즉각 한덕수 대행에게 통첩했다.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들 거부하면 죽여!"라고, 한덕수 총리가 이 겁박에 굽히면 체제는 더 한층 형틀어진다. 그 이후는 보나 마나다. 《가속도로 급전직하!》

끝없는 악법 대행진

저들은 《6개 악법》을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 경제계를 자기들의 《정치》가 통제하겠다는 수작이다. 어떤 법들이었기에?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질타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량하라 하면 영업 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는 법." "중국 등 경쟁자들이 《박수하고 좋아할 법》."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도 격파했다. "농업 관련 4개 법안은 《농안법(農安法)》 아닌 《농망법(農亡法)》, 《재해대책법》은 《재해(災害)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법》."

국민의힘의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도 있다. 다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서 탄핵 심판과는 무관했고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 당시엔 비슷한 일이 반복되리라 예상하기 힘들었고, 이 문제에 관한 법적 해석을 확정 짓지 않았다. 한 번은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이론상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9명 체제 회복은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의 '임명 불가능' 주장은 탄핵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빨리 임명"이라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현재를 마비시키려고 '6명 체제'로 만든 것이 민주당 자신이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절차나 결정에는 어떤 흠집도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은 끝이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이 역시 재판 지연 작전이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화영씨는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공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되자 이번엔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기소됐지만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룬 것이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慨叹했을 정도다. 그렇

서울형 재개발 '모아타운' 첫 착공, 주택난 해법 가능

서울 강북구 변동에서 서울시의 재개발 프로그램인 '모아타운' 사업 1호 착공식이 열렸다. 노후 주택 밀집지의 재개발은 대개 사업성이 떨어져 착공에 10년 이상 걸리는데 '모아타운'은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해 이번 1호 사업은 추진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다. 100~400가구 단위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조합 4~5개를 둘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의 통합 재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1호 사업지인 변동의 경우, 노후 주택과 저층 빌라가 밀집해 길도 좁고 주차 공간도 부족했다. 재개발 조합별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서울시가 통합 심의했다. 용적률을 높여주자 사업성이 개선돼 속도가 났다. 370가구 노후 주택이 2028년 최고 35층 높이의 1242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주택 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인근에 녹지와 산책로도 조성해 주거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모아타운 1호는 여당 소속 시장이 도입한 정책이지만 야당 소속 구청장도 적극 지원했다. 재개발로 밀려나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약 2000만원씩 이주비를 지원하고 대신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을 줄여주어 재개발 수익성을 높여줬다.

서울은 집값이 높고, 주택 수 자체도 부족하다. 전체 가구의 52%가 무주택이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평균 1만5500명으로,

싱가포르(8100명)나 홍콩(6600명)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서울

주거의 42%는 변동 같은 저층 주택지다. 이런 노후 주택 지역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달리 주택난 해소 방안이 없다. 박원순 시장 10년간

노후 주택 단지에 벽화를 그리는 시의 '도시 재생' 정책은 세금만

낭비했다. 현재 서울에 109곳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돼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며 주거 질도 높일 방법은 없지 않다.

죽기 아니면 살기뿐

한덕수 대행은 결단하라!
※ 6개 악법과 특검법을 거부하라!
※ 탄핵도 불사하라!

국민의힘은 배신자를 8명 미만으로 깔아라!
그리고 않고 소위 대세를 허위에 밤낮 꾸이기만 하다간 영원한 열폐자로 전락할 것이다.

자유인들, 타락한 전체주의 좌파를 단호히 거부하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한동훈 부류가 사는 법
(↑ 대통령 수사)는 번개... (이재명·문재인·조국·황운하·윤미향 등 수사·재판)은 거북이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2월 16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